

이슈페이퍼  
24-9호  
디지털경제연구원

# 2024년 디지털 산업 이슈&트렌드 총결산

## 요약

## 디지털 산업, 격동의 2024년

디지털경제연구원

- ▶ 이슈페이퍼 24-9호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디지털경제연구원에서 선정한 12개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2024년 디지털 산업 트렌드와 사회·경제적 변화 및 그에 따른 제도적 논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정리함
- ▶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볼 때, 2024년은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국내 규제 강화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며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 시기
- ▶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현실에 맞는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임

## 1월의 키워드: ‘플랫폼법’

- ▶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각계에서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및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함
  -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소비자 등 플랫폼 규제의 이해당사자로부터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논의가 이루어짐
  
-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행정부 및 주요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플랫폼 규제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정부의 법안 추진이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 지적
  - 미국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미 상공회의소 또한 우려를 드러냄

## 2월의 키워드: ‘이커머스’

- ▶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소비자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음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테무(Temu) 등 중국 업체들은 초저가·무료배송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 '24.5월 플랫폼 사용자(명) : 쿠팡 3,112만, 알리익스프레스 830만, 11번가 800만, 테무 797만, G마켓 568만 등
  
- ▶ 현재 중국 플랫폼 업체들을 제재할 수 없는 수단이 전혀 없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음
  -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저가공세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이며, 또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을 유통하며 불공정행위로 초저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 이로 인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까지도 피해를 입고있어 이커머스 생태계가 혼란스러운 상황



### 3월의 키워드: ‘가상자산’

- ▶ 해외 각국에서 가상자산규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잇따라 가상자산의 신뢰성과 투자 접근성이 향상됨
  - 미국 상품건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분류법을 발의하여 가상자산 생태계 참여자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지난 1월 미국에 이어, 3월 11일 영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비트코인 화폐가치가 재평가됨
- ▶ 반면 국내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집중된 1차 입법 이후 2차 입법 논의와 토큰증권발행 법제화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 정비가 진행되지 못하여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세계 3위에 달할 만큼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법제화는 해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며, 그럼에도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강하여 스타트업도 증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됨

### 4월의 키워드: ‘총선’

- ▶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ICT분야 규제가 22대 국회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이어짐
  -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플랫폼법, AI기본법, STO 등의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
- ▶ 특히 여야 모두가 플랫폼 규제 강화에 공감대를 가져 빠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 처리에 앞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차분한 재검토 과정 필요
  - 범야권의 압승에도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이며, 특히 종전보다 규제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 그러나 플랫폼의 지배력을 측정하는 매출액 등은 중국 플랫폼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학계로부터도 비판이 증가함



## 5월의 키워드: ‘라인’

- ▶ 일본과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부재로 인해 AI를 대규모로 학습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자국 플랫폼은 이미 자국 언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AI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AI 개발 플랫폼과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 이에 5월, 일본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5월 10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본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기업이 국가 중요정보를 유출하면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석됨
  - 또한,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할 계획

## 6월의 키워드: ‘22대 국회’

- ▶ 6월에는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이전 21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플랫폼법과 인공 지능 기본법 등 상당수의 법안 논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1대 국회부터 선제적으로 제정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경향이 심해 산업 방향성과 앞으로의 발전 여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상황
- ▶ DMA의 규제 수준은 기존의 법령·정책들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 시 DMA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위험함
  - EU 국가 상당수는 단 한 건의 특허출원도 없는 등 EU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절대 동일하지 않으며, DMA 차용 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음
  - EU 내에서도 10여 년간 논의를 거쳐서 DMA와 DSA(디지털서비스법)가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함





## 9월의 키워드: ‘딥페이크’

- ▶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딥페이크 관련 논의가 급증하였으며,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본회를 통과함
  -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관련 토론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며, 9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의 법률을 개정함
-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의 본질은 기술의 ‘악용’이므로, 기술 자체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은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므로,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접근법 보다는, 기술의 ‘악용’ 사례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현행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함

## 10월의 키워드: ‘클라우드’

- ▶ 클라우드에 대한 공공부문의 긍정적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
  - 정부는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도 공공시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율은 낮은 편이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80%를 외국 기업이 장악
- ▶ 하지만,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정부가 새로운 보안체계인 ‘다층보안체계(MLS)’를 발표했지만 보안인증(CSAP) 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언급되지 않아 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



## 11월의 키워드: '트럼프'

-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은 글로벌 IT 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1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이 폐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디지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규제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보임
- ▶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미국의 '신보호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미국 신보호주의에 기반한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 정책은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잡았으며, 미국의 기조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함

## 12월의 키워드: 'AI'

- ▶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국내 AI 산업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로 산업 위축이 우려됨
  -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됨
  - 투자의 한계와 정책적 지원 부재 등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본 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산업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 검토가 필요



## 시사점

- ▶ **|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세 |** 해외 플랫폼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지며 국내 시장에서의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짐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커머스의 한국 시장 확대는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자국 기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짐
  -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해외 기업 점유율은 80% 이상이며,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 추진 움직임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자국 기업 영향력은 미미함
  - 향후 전 산업의 기반기술이 될 AI 산업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 **| 기술 패권 경쟁의 본격화 |** 해외 각국은 자국 기업과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확인
  - 일본은 자국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함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2기까지 자국 기업에 대한 신보호주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 프랑스는 자국 AI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EU의 AI Act에 강하게 반대했고, 자국 AI 기술 개발에 저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후에야 법안에 합의, 올해 3월에 법안이 통과됨
- ▶ **| 성급하게 강화되는 국내 규제 |**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빈번해졌으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전년도 말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발표 후 연초부터 플랫폼 공정거래가 화두에 올랐으며, 22대 총선 주요 공약과 이후 국회에서의 주된 의안으로 다뤄짐
  - 하반기에 티메프사태가 발생하고, 딥페이크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논의되는 후속 조치들 역시 플랫폼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짐
  - AI 기본법이 통과되었으나,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성급한 입법으로 인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규제 부담을 높이고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됨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었으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화는 미비한 상황
- ▶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제도화 방안이 요구됨
- ▶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디지털 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산업의 현실에 맞는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을 도모해야 함